

정책 동향

준비10호(10/23~10/29) 2017년 10월 30일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주요 동향 >

- ▷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강군몽(強軍夢)” 등 세계적 지도국이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의 표출로 평가되는 중국 당대회에 주목함. 평창 올림픽 계기로 올림픽 휴전 아이디어, ‘核 균형시대’를 열자는 주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보고서의 논리 구조와 논거 살펴봄.
- ▷ 들쭉날쭉 정치개념이 된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보고서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학별 취준생들의 생각 차이는 참조할만한 자료임.
- ▷ 정부의 신DTI 도입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해 온 기존 다주택자들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는 악순환” 우려와 각 당의 입장을 살펴봄. 또 한미일 국방장관 발표문 중 우려점과 SCM 공동발표문의 주요 변화에 주목함. 또 자한당 대표의 CFR 연설문에 나타난 문제점 살펴봄.

※ 정책네트워크내일의 공식입장이 아닌 회원님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이므로 인용·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국회입법조사처	외교	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동아시아재단	통일	북핵 해법: 올림픽 휴전과 2단계 동결론	3
아산정책연구원	안보	전술핵 재배치로 한반도 ‘核 균형시대’를 열자	4
민주연구원	안보	핵추진 잠수함 5문 5답 -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5
새로운사회를여는 연구원	청년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6
대학내일20대연구 소	청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학별 생각 차이	7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기관명	분야	제목	쪽
관계기관합동	경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8
자유한국당	안보	홍준표 당 대표 미국외교협회(CFR) 연설	9
국방부	안보	제4차 ADMM-Plus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보도 문	9
국방부	안보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0

1. 싱크탱크 정책 동향

■ 시진핑 주석의 중국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예경, 입법조사처, 2017.10.24.)

<요약>

- 1) 당 대회 보고에서는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개념이 향후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통치 사상으로 천명...이 개념은 1980년대 덩샤오핑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등의 계보를 이으며...1980년대에는 ‘물질에 대한 수요와 낙후한 생산력 간의 모순’이 사회의 주된 모순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인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을 ‘신시대’ 중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
- 2) 시 주석은 중국이 종합 국력과 국제영향력에서 선도적 국가가 되는 목표 시점을...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 사회가 완성되면 2035년까지 15년을 1단계로 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고, 2035년부터 2050년까지를 2단계로 해서 1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러한 발언들은 중국이 세계적 지도국이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이 발현되고 있는 것.
- 3)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군대 기계화·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국방 및 군대 현대화를 달성하여, 2050년이 되면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한다는 3단계 발전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시 주석의 집권 2기에는 ‘강군몽(強軍夢)’ 실현을 위해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4) 시 주석은 외국 기업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를 확고히 할 것을 강조했다.
- 5) 시진핑 주석의 19차 당대회 보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첫째, 중국은 국력 증대에 따른 자신감으로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2050년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는 자신감이 표출되는 시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대응방안은...의회 및 정당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국회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도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중국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방안을 모색

<원문 읽기> <https://goo.gl/HSELBU>

■ 시사점

- 1) 중국 당대회는 세계적 지도국이 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평가에 주목함. 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강군몽(強軍夢)” 등의 핵심적 키워드들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한 중관계를 설계할 필요성 있음. 2)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필자의 제언도 경청할 필요성.

■ 북핵 해법: 올림픽 휴전과 2단계 동결론 (김연철, 동아아시아재단, 2017.10.24.)

<요약>

- 1) 북한의 핵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임 체인지’론은 진단이 틀렸다...우리는 제재와 억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해결의 입구를 찾아야 한다...북한도 협상의

수요가 있다. 첫째는 제재의 효과다...시장의 역할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둘째...북한은 핵 보유의 기술적 완성 이전에 정치적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은 평화공세로 전환할 것이다...이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2) 동결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물질 생산이다...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중단을 1단계로 하고, 핵물질 생산 중단을 2단계로 구분하자...1단계 상황악화 중단을 올림픽 휴전과 동시에 추진하자...이미 문재인 정부는 유엔에 평창 올림픽 개막 7일전부터 폐막 7일후까지 전 세계의 분쟁을 일시 중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관례에 따라 11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의결한다.

4) 중국은 쌍중단, 즉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제안한 바 있다. 올림픽 휴전과 쌍중단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올림픽 휴전'을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장애인 올림픽 폐막일인 3월 18일 이후 7일까지 연장하면, 한미군사훈련 시기와 겹친다. 남북한은 이 기간 동안 상황악화 중단을 합의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자.

5) 핵물질 생산 중단을 논의할 2단계 동결 협상은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2단계 동결 협상을 남북한과 미중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회담'과 동시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평화체제가 북핵 해법의 출구다...입구에서 일반적인 불가침 협정에 해당하는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중간단계로 종전 선언과 종전관리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

<원문 읽기> <https://goo.gl/9urHP1>

시사점

- 1) “북한은 핵 보유의 기술적 완성 이전에 정치적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언젠가는 북미 간 협상국면 도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음.
- 2) 향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가운데 협상국면을 이끌어 낼 경우 2단계 동결협상 아이디어는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일독할 필요성 있음.

■ 전술핵 재배치로 한반도 '핵 균형시대'를 열자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2017.10.24.)

<요약>

1) 2017년 북한이 단행한 두 차례의 ICBM 시험과 수소탄 실험은 한·미 역대 정부가 지난 26년간 고수해 온 비핵화 해법이 실패했고 한반도 비핵화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확인하는 사건...북한이 이미 개발해서 손에 쥐고 있는 핵을 미국이 무력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일 뿐이다...미국이...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없다...김정은 정권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반드시 핵을 사용하고 최후를 맞이하려 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제거된다고 해도 북한정권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복성 핵탄두를 터트릴 가능성이 높다.

2)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한 현 상황은 앞으로 북한이 美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해서 자체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멈추는 자연동결이나 북·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통한 합의동결 형태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경우

모두 북한은 일정 수준의 핵탄두와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핵 독점 시대가 열린 것을 미국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핵 시대의 냉엄한 교훈이자 현실이다...핵무기는 비핵국으로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한 핵국의 절대무기인 것이다...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남 북한 간에 ‘核 對 核’의 안정적 핵 균형을 유지하면서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억지하고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 북한 관리전략의 요체이다.

4)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한반도의 안보구도는 기존의 ‘재래식 對 재래식’의 재래식 균형과 더불어 ‘핵 對 핵’의 새로운 핵 균형이 병존하는 “쌍균형 안보구도”(Dual-Balance Security Structure)로 전환될 것이다...사실상 핵 균형에 의해 지배될 것이므로 한반도에서는 사실상 핵 균형 시대가 열릴 것이다.

5)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은 미국이 펼치는 핵우산의 우산살 하나를 한반도에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유사시 핵우산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확실한 보장장치로서 핵 균형 시대에 한·미 동맹을 결정짓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제기되는 핵우산공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분리에 대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원문 읽기> <https://goo.gl/h7wmFh>

시사점

- 1) 주한미군 자체가 인계철선임에도 불구하고, 전술핵을 배치해야만 “‘핵 對 핵’의 새로운 핵 균형”과 인계철선 역할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술핵 재배치 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2) 미국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상설조직(핵전력 구성, 운용 독트린, 표적선정 등 협의와 정보공유)을 강화하여 억제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해법임.

핵추진 잠수함 5문 5답 - 필요성과 가능성 검토 (민주연구원, 2017.10.26.)

<요약>

- 1) 핵추진 잠수함이란...농축우라늄의 원자로 내 핵분열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의 우라늄 농축수준은...20% 미만 ~ 90%. SLBM과 같은 핵무기 탑재용으로 잠수함 건조 시 95% 이상 농축
- 2)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 및 인도, 총 6개국이 핵추진 잠수함 운용...핵보유국이 아닌 브라질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중
- 3)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잠수함에 비해...5가지 측면에서 우위
- 4) 북한의 SLBM 공격을 억지(Deterrence)...위해서는 북한의 잠수함을 무한대로 잠항하며 감시·추적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이 효과적인 대응전력, 우리 해군은 디젤잠수함만 14척 보유...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 추적을 위해서는 속도가 2~3배 빨라야 하는데, 디젤잠수함은 공기보충(Snorkeling) 시 역추적되거나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음
- 5)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도전과제는...①핵추진 잠수함 적용 원자로 설

계 : 우리 기술력에서 가장 쉬운 과제, 2~3년 소요 예상 ②고속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선체구조 설계 및 센서 개발: FRP 선체 제거, 구조챔버 탑재, 대형 구형소나 장착, 센서 성능향상 등 ③소음제거 기술 개발 : 고속 진동 감소기술, 음향흡수타일, 흡음재, 통합전기추진방식 등 ④대기관리장치 개발 : 이산화탄소 등 27종의 물질에 대한 정화기술 등. 과제 ①은 당장 국내 개발 가능, ②~④는 기초수준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 유럽 등과 기술협력사업으로

<표 2> 핵추진 잠수함 특징 및 장점

구분	핵추진 잠수함	디젤잠수함
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37~47Km/h (디젤의 3~4배) • 수중작전 중 보급품/연료 재보급 및 기항지 불필요 • 기동전투단과 같은 높은 속도로 기동, 방호임무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1~15Km/h • 수중작전 중 보급품/연료를 반드시 탑재, 기항지에서 승조원 휴식 •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속도로 기동 → 1시간 내 축전지 바닥
수중작전 지속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제한 → 적 해역 침투, 고속기동, 은밀하게 적 잠수함 추적·감시 • 적 공격 후 고속으로 위협현장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2~3회 축전지 충전 → 수시로 위치 노출, 적 잠수함 추적작전 불가 • 축전지 소모로 인해 저속 방어에 치중
공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등한 추진력으로 선체 크기 확대 가능 → 어뢰, 기뢰, 핵탄두 미사일 등 다중·다량의 화력 탑재 가능 • 장기간 고속기동 → 표적 탐색·추적, 공격, 실패 시 재공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전지 추진으로 3천톤 이상이 되면 추진력 약화 및 선체 크기 확대 제한 → 무기 적재능력 빈약 • 축전지 소모로 인해 일정지점에서 매복해 대기하다 공격할 수 밖에 없음
생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한 스텔스 → 필요시에만 수면에 올라와 정보수집, 피탐 시 전속이탈, 수중에서 무제한 회피기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Semi) 스텔스 →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에서 축전지 충전, 디젤엔진 가동으로 대잠탐지장비에 쉽게 노출함
보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중 무제한 작전 → 다양한 무기를 탑재해 수중에 매복하면 지상전에 실패해도 최후까지 생존해 보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성으로 부여된 공격임무만 수행 → 적에게 탐지되면 생존을 위해 수세 작전으로 전환 (저격수 수준)

추진하면 개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판단

<원문 읽기> <https://goo.gl/8FGqed>

시사점

- 1)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을 중심으로 정리된 자료임. 따라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 핵잠수함의 치명적 약점인 소음문제로 인해 공격당할 가능성,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와 장기간의 개발 기간은 문제점임.
- 2) AIP(공기불요추진체계) 탑재 장보고-III(3000t)는 2주 정도로 수중 체류 가능하고, 소요 예산 또한 적정하고, 잠수함의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점을 대안으로 주목해야 함.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새사연, 2017.10.25.)

<요약>

- 1) 청년몰, 청년배당, 청년수당, 청년주택, 청년통장, 청년허브 등 각종 청년정책과 영화 ‘청년경찰’을 비롯한 상품명에 이르기까지 청년이란 단어가 참 흔하다...현행 법령 중 유일하게 이름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란 명칭으로 2004년에 제정된 이 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명확.
- 2) 서울·울산·세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그대로 따르지만, 부산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를 적용하고, 대구·광주·대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바로 이 「청소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년을 정의하는데, ‘청소년 중 만 1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
- 3) 생애주기 상 이행기를 교육과정의 완료 및 취·창업 등 직업세계로 진입이 이루어지는 시기

로 정의한다면 의무교육(중학교)이 종료되는 만 15세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만 18~19세부터 청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2000년대 들어 취업난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이행기가 길어지고 있어 대학, (군 복무), 취업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만 29세 정도까지의 인구집단으로 청년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재(2017년 10월) 기준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당헌·당규를 확인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만 45세 이하를 청년당원으로 규정하였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만 39세 이하,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를 적용하였다. 특히 국민의당은 최근 청년당원의 연령상한을 만 39세에서 만 45세로 상향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당시 주요한 이유로 ‘농어촌에 40세 이하 인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2030 당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연령상한을 상향하여 청년 당원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정치언어’의 활용 사례다.

<원문 읽기> <https://goo.gl/C353Ha>

■ 시사점

1) 필자가 정의한 18~19부터 29세까지의 연령대를 청년으로 정의하자는 제안과 또한 최근 국민의당에서 민주당과 같이 청년의 나이를 45세로 상향한 조치에 대해서도 2030 당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비판적인 지적에 주목함.

■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대학별 생각 차이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7.10.25.)

<요약>

1) 지난 7월부터 322개 공공기관이 전면 시행중인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이나 학력, 신체조건 등의 정보를 가려 편견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채용 제도...취준생 1,400명을 대학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44.0%가 블라인드 채용에 찬성...지방 거점 국립대 취준생이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TOP-TIER그룹과 수도권 주요 대학 그룹은 외부조건이 아닌 자소서와 실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지방 거점 국립대 그룹은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30.3%)을 찬성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32.4%가 블라인드 채용을 반대했는데, 지금껏 자신이 쌓아왔던 경험과 스펙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38.4%)을 가장 큰 이유.

4) 블라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위는 키와 몸무게(66.3%)가 차지했다. 가족사항(65.1%)과 증명사진(57.6%)이 뒤를 이었는데, 신체조건처럼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항목이나 가정환경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원문 읽기> <https://goo.gl/g39B31>

■ 시사점

1)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참조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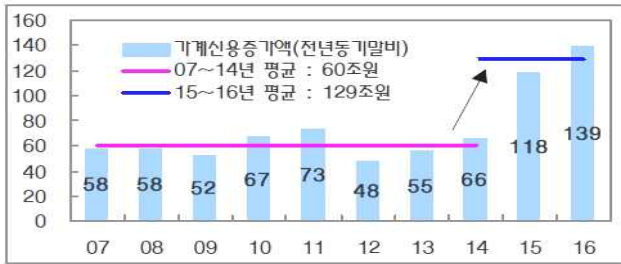
2. 정부·정당 정책 동향

■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기관합동, 2017.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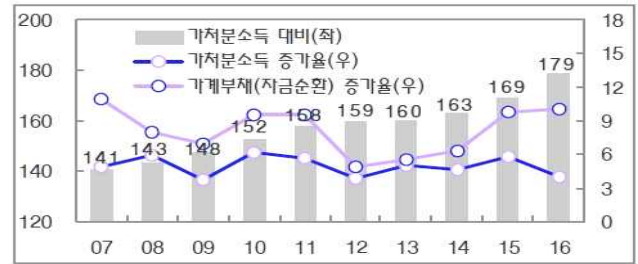
<요약>

1)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입니다... '15~'16년간 과거 추세('07~'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 증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 상승

< 가계부채 증가액(조원) >



< 가계부채 증가율 및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



* 자료 : 한국은행

* 자료 : 한국은행

2)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향후 5년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05~'14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15~'16년 제외)간 연평균 증가율(8.2%) 수준 이내로 점진적 유도...'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기관의 보증비율을10% 포인트(p) 추가로 낮춰 합리적인 여신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新DTI와 DSR 비교 >

	新DTI (Debt to Income)	DSR (Debt Service Ratio)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산정방식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 연간 소득	(모든 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 소득
활용방식	대출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	금융회사 여신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예정

3) 차주별 맞춤형 지원...약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

<원문 읽기> <https://goo.gl/MTMZQp>

시사점

1) 규제의 핵심인 다주택자 대상 신DTI 도입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해 온 기존 다주택자들의 기득권은 유지한 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여 악순환 우려됨. "DTI 강화와 3% 성장 유지는 상관이 없으며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기재부장관이 말했지만, 3% 성장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리스크 키울 우려.

2) 국민의당은 "신DTI·DSR 시행은 긍정적이다" 바른정당은 "신DTI 도입 등으로...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新DTI나 DSR 도입방안도 장래 부채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지 현재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고 논평함.

■ 홍준표 당 대표 미국외교협회(CFR) 연설 (홍준표, 자유한국당, 2017.10.26.)

<요약>

- 1) 저와 자유한국당은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THAAD를 조속히 최종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이 가입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2) 좌파세력이...전작권 환수가 마치 자주국방의 길인 듯 선동하고 있지만,...북한의 위협이 현실의 공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든든한 국방체계인 한미연합방위를 흔드는 시도는 북한의 김정은만 좋아할 일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 3)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1991년 한국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조속히 재배치해야만 합니다. 70%에 가까운 한국 국민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 4) 저와 자유한국당은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나가는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달러 수준인 미국산 LNG 수입을 2020년에는 20억 달러까지 늘리고 2025년 이후 도입 물량을 중동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현재의 무역 불균형을 크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저는 한미 FTA 폐기 주장에 결단코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 시점에서 개정을 논의하기 보다는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5) 지금의 북핵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남북의 핵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위한 한미핵동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문 읽기> <https://goo.gl/rKUAXc>

시사점

- 1) “THAAD를 조속히 최종 배치” 하더라도, MD체계 편입은 경계해야 하며, 한미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군 3축 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조기 완료해야 할 것임.
- 2)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도 반대하는 사안으로 현실성이 없으므로 미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약체(EDSCG)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제4차 ADMM-Plus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공동언론보도문 (국방부, 2017.10.24.)

<요약>

- 1)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 이쓰노리 오노데라 일본

방위대신은 10월 23일, 2017 ADMM-Plus(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필리핀 클락에서 제9차 연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문제, 지역 안보상황, 안보협력 발전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2) 3국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美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아울러 3국 장관은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1) [주한 미대사관] “The three Ministers also discussed other regional security issue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The three Ministers reaffirmed that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must be ensured, and that all disputes should be resolved in a peaceful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3-2) [주한 미대사관] “세 장관은 미군 전폭기가 참가하는 다수의 합동 훈련 임무를 포함하여 대북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 공유를 확대한 3국 공동의 노력을 치하였다. 또한, 이들은 미사일 경보와 대잠전 연습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임을 공약했다. 세 장관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그 밖의 다른 지역안보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세 장관은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분쟁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원문 읽기> [국방부] <https://goo.gl/iVJ7vA>

[주한 미대사관 한글본] <https://goo.gl/Nc9wWV>

[주한 미대사관 영문본] <https://goo.gl/e2kf8W>

■ 시사점

1) 3국 장관의 합의문 중 해양안보 부분은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분쟁 관련 표현으로 중일 간 분쟁에 한 쪽 입장을 지지하기보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필요성.

2) 그러나 미국측 영문본과 한글본은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과 일반적인 분쟁에 있어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의 발표문은 “보편적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따라” 부분이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

■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국방부, 2017.10.28.)

<요약>

1)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美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美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계기에 확장억제 관련 정책·절차와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하였다.

<원문 읽기> <https://goo.gl/5mmBNT>

시사점

1) “美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계기에 확장억제 관련 정책·절차와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핵우산 공약의 확인과 사실상 핵공유의 기제이기도 한 ‘DSC’와 ‘EDSCG’ 메커니즘 발전 강화에 주목함.

2) 또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시기’에 기초하기보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합의한 점에도 주목함. <끝>